산업통상부

# 보도설명자료

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시점 2026.11.12.(목)

#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.

**<보도내용>**

□ 2026.11.12.(목) 중앙일보 「제2 앨리스 황 판치는데…따로 노는 K방첩」 제하의 기사에서,

○ 기술유출 우려는 커지는데, 대응체계가 국정원, 경찰청, 산업부 등으로 분절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**<정부 입장>**

□ 정부는 기술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자세로 핵심기술 보호와 유출 방지 등을 위해 <범부처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>, <국가방첩전략회의>, <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> 등 관계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○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유출 동향 및 주요 현안 등을 공유하고,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기술유출의 예방부터 적발·수사까지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□ 산업부는 「산업기술보호법」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관리 및 기술유출 처벌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특히,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정비하는 등 기술안보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○ 국정원은 「국정원법」·「방첩업무규정」 등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첩보를 수집하고, 정보·수사기관간 신속 정보지원 채널을 운영하는 등 관계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.

○ 경찰청·중대범죄수사청·지재처는 이첩 첩보 또는 직접 조사를 토대로 엄정하게 기술 유출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각 기관은 전담 수사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는 한편, 기술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상시 정보 공유 등 기술 유출 수사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.

□ 앞으로도 정부는 핵심기술 유출이 우리의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 등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고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○ <범부처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> 정례 개최 등을 통해 기술유출 방지 정책과 조사·수사 기관의 공조 대응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. 또한 「산업기술보호법」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술안보 대응 역량을 지속 높여 나가며, 현장 중심의 기술보호 및 유출 방지 협업 과제를 토대로 「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('27-'29)」 등을 수립하겠습니다.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 부서 | 산업통상부<br>기술안보과 | 책임자 | 과 장 | 유 은 (044-203-485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정수진 (044-203-4858) |
| | 경찰청<br>방첩수사과 | 책임자 | 총 경 | 이상엽 (02-3150-2094) |
| | | 담당자 | 경 정 | 이원희 (02-3150-2796) |
| | 중대범죄수사청<br>사이버기술수사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재표 (02-2609-4570) |
| | | 담당자 | 수사관 | 현준우 (02-2609-4576) |
| | 지식재산처<br>지식재산보호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준경 (042-481-5213) |
| | | 담당자 | 서기관 | 김은영 (042-481-5761) |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